

여야, 내 투기 국수본 수사 질타... “투입 인력 비해 더더”

野 “사고 공직자가 컸는데...수사 대상 80% 민간인” 與 “철저한 수사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여야는 12일 경찰청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 관련, 부동산 범죄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수사에 더 속도를 내기 시적인 성과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창룡 경찰청장, 최승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 등으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았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여야 합의로 현안 보고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수본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지난 3월 10일 공식 출범했다. 당초 외부 인력 파견을 포함해 770명으로 꾸려졌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1500명 수준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부동산 범죄 수사에 나선 두 달 동안 2082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219명을 검찰에 넘겼고 1720명은 여전히 내·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민간인에 편중돼 있고 수사 인력이 확대됐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을 향해 “중점 수사 대상이자 수사의 발단이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아닌가”라며 “그런데 수사가 기획부동산으로 가서 기획부동산이(수사 대상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리고 수사 대상자 2082명 중 민간인이 80%, 송치 인원도 민간인이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국민들 사이에서 사고는 공공기관이치고 피해는 민간인이 본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아주 거창하게 수사를 시작했지만 눈치 보다가 보니 공공기관 공직자, 고위 공직자, 정치인보다 민간인 쪽으로 수사가 흐르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특수본 관계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은 조사하고 공개했나”라며 “특수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춘식 의원은 “합수본은 총인원 규모 770명으로 출발해 1560명으로 확대했는데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수사 대상의 절반 정도 되는 45.6%는 타 기관 고발과 일반인 고발에 의해서 이뤄졌다. 국수본,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

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수사 내용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요구하며 더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적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는 세력이 많이 생겨 잘하면 사업가가 되고 못하면 브로커가 되는 일이 생긴다.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들어가 일을 하기도 한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국가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하고 있구나 하고(투기) 안 한다. 매달 한 번씩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위해 정화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라”며 “경찰, 검찰 영역싸움보다 이런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협조해서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박재호 의원은 박완수 의원의 수사 대상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시 작은 고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에 있

등 의견이 나왔다.

부동산 문제와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서민으로서 상실감을 많이 느꼈다.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구나”, “눈 뜨면 몇억씩 올라간다”, “막상 집권하고 나서 보니 자기네들도 똑같이 LH 때문에 더 크게 실망했다” 등 반응이 담겼다.

반면 잔류 지지층에서는 “수구 세력과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밀린 결과”, “센터 갈등” 등을 패인으로 꼽았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는 분들로부터 출발했는데 하다 보니 기획부동산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라며 “특정 인물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무슨 직업이 어떻다는 것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옹호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구속자가 현재까지 공무원, LH 직원 등 13명”이라며 “투입한 인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사건이 더디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민주당, 재보선 패배 원인 보고서 ‘조국·부동산·LH’ 지적

조국 관련 “현 정권 위선 보여” 부동산·LH “평생 모아 못 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4·7 재보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에는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

시당은 최근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서울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한 후 결과 보고서를 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해당 인터뷰는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당시 박영선 후보에 투표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잔류 그룹’과 지지를 철회한 ‘이탈 그룹’으로 유

권자들을 분류해 진행됐다.

이탈 그룹에서는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이 주된 선거 패인으로 꼽혔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현 정권의 위선을 제대로 보여준 사태다”, “현 사태의 시발점이다”, “저 부부가 애들을 그렇게 키웠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이재명, 대선경선 연기론에 “원칙대로 해야 제일 합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대선경선 연기론과 관련,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부동산 공평과세 국회토론회’ 후 만난 기자들이 경선 연기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하며 “더 길게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이는 현 당헌당규대로 대선 180일 전인 오는 9월 초 대선후보를 확정해

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 쐬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부동산 실정에 지방자치단체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지적에 대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받아냈다.

앞서 이 지사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지적하고, 이 지사도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정책을 예시로 들며 “여당야당이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며 관료들을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관료들을 통렬하게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를 예들려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우리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혀 책임이 없다고까지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해서 기득권, 또는 관료들의 비협조나 저항을 말씀드렸던 거지 특정한 다른 분들

을 말할 게 아니다”라며 “내 (SNS) 문장 표현에 고위 직인 공무원, 이라고 써놨으니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로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소병철 “사업주와 대등 입장에서 권리 행사...공정 보상 도모”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에게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정보의 제공을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추가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에도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 노동자는 재해로 인한 고통만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보험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면 정보와 자료 접근 등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있다.”면서 “산업재해를 최소화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지만, 산재가 발생한 경우엔 피해 노동자가 사업주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입증 부담을 덜어드려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